민주 혁신위원장 '외부 인사' 선정해 전권 위임

지도부, 비명계 요구 수용…이르면 이번주 선임 후 출범 목표
내년 총선 공천권 범위엔 의견 분분…더민주전국혁신회의 출범

더불어민주당은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외부 인사'에 맡기고 전권(全權)을 위임키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르면 위원장을 이번 주 내에 선임하고 이달 중순쯤 혁신위원회를 출범할 방침이다. 하지만, 친명(친 이재명)-비명(비 이재명) 진영을 충족할 혁신위원장 외부 영입 자체가 쉽지 않을 전망인데다,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된 전권의 범위를 놓고도 상당한 파열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4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는 이달 중순 혁신위 출범을 목표로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혁신위 콘셉트는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전권형'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위 구성이 가닥을 잡은 것은 이재명 대표가 상당한 의지를 실어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당 쇄신을 주제로 한 의원총회에서 전당대회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정치혁신 방안을 준비하기 위해 당 차원의 혁신기구를 만들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2021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확산되고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 등 잇단 악재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당 쇄신 목소리가 분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구 성격과 위원장 인선 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면서 좀처럼 진척이 없었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지도부가 당 쇄신과 관련한 전권을 혁신기구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친명(친이재명)계는 선출직 지도부의 고유 권한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등 계파 간 대립 조짐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전권형 혁신위'로 비명계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모양새가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내에서는 지난 2015년 당시 문재인 당 대표가 재보선 참패 후 사퇴 압박이 커지자,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이끈 혁신위에 전권을 위임한 사례가 '모범 사례'로 거론되기도 했다.

다만, 내년 총선 공천 룰이 이미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지도부가 혁신위에 어떤 권한을 위임할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관계자는 "위임하는 권한 범위는 지도부가 정무적 판단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며 "이를 두고 당내 계파간의 신경전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 친명과 비명을 넘어 민심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마땅한 외부 인사가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도 고민이다. 혁신 이미지에 강력한 리더십 그리고 인지도를 한꺼번에 갖춘 인물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상당 기간 '구인난'을 겪지 않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전국 단위 혁신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4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출범식을 가져,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은 50일 혁신대장정 기간 선포 후 20만 혁신당원 모집 운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더혁신회의는 100여 명의 상임위원들을 위촉했으며 지역위원장 및 당직자, 청와대·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출신 인사를 비롯해 법조계, 학계, 문화예술계, 언론계 등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을 통해 "민주당은 바뀌어야 한다. 먼저, 현역의원들의 통렬한 반성과 혁신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180석을 갖고도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촛불개혁의 적기를 놓치고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책임을 인정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년 전 고비용·저효율 정치를 극복하고자 원내정당을 표방했다면, 이제는 저비용·고효율 정치를 위해 비민주적 의원집중제를 해소하고, 120만 권리당원 중심의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대중정당으로 과감히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혁신회의는 ▲강력한 정치연대 규합 및 지지 ▲맹목적 냉전외교 저지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복원 ▲사회양극화·불평등 극복을 위한 국민 참여 플랫폼 구성 ▲개혁성 회복, 공천 혁신, 대의원제 폐지, 특별당규 개정 등 정당혁신 선도 ▲총선승리·정권교체 위한 국민적 역량 및 희망 집대성 등을 5대 강령으로 정했다. 김우영 더혁신회의 상임운영위원장은 "정당혁신과 정치교체는 한시도 늦춰서는 안 될 시대적 요구"라며 "민주당의 과감한 혁신만이 총선승리와 정권심판의 자물쇠를 풀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원외인사들로 구성된 전국 혁신위가 내년 총선 공천을 놓고 당내 현역 의원들과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상당한 혁신 파동을 몰고 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반인권적 노동자 탄압 규탄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인 서영교 최고위원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을지로위원회·건설노동자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TF·행안위 소속 의원 주최로 열렸다. /연합뉴스

민주 '후쿠시마 오염수·노동탄압' 대정부 투쟁 강화

오염수 검증 특위 설치 요구…'노동자 탄압' 장외 투쟁 병행 고려

여야가 4일에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둘러싼 대립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윤석열 정부의 노동·언론 정책을 고리로 대정부 비판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 대응을 연일 비판하며 장외집회까지 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성을 되찾으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10개월 앞두고 잇따라 터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등 대형 악재로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두 이슈를 앞세워 '정권심판론'에 풀무질하며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서명 운동본부 발대식을 연 데 이어 전날에는 부산에서 첫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어 윤 대통령 등 여권에 대한 맹비난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도 참석한 부산 집회에서는 "이런 작자에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 우리가 윤석열을 심판하자"(서영교 최고위원) 등 윤 대통령을 겨냥한 원색적 비난까지 등장했다.

민주당은 국회 오염수 검증 특위 설치를 요구하고 관련 상임위별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며 원내에서도 정부·여당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노동 정책에도 대립각을 세우며 전통적 지지층인 노동계에 결집 시그널을 발신하고 있다.

경찰의 노조 농성 진압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가 "다시 야만의 시대, 폭력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다"고 비판한 것이 신호탄이었다.

당은 '윤석열 정부 건설 노동자 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꾸려 국회 차원 대응에 나섰고, 이와 관련한 장외 투쟁 병행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현 김기현 대표는 이날 SNS에서 "민주당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현 정부를 흔들까' 하는 선전·선동 의지만 가득 있는 것 같다"며 "국민이 준 의석수가 부끄럽지 않도록 이성을 되찾고, 양식 있는 정당의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말했다.

당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도 SNS에 "민주당은 기저에 깔린 반일 감정으로 또다시 죽창을 들었다. 핵에 대한 공포감으로, 선동과 광기의 괴담으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고 적었다.

성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부산에서 열린 집회에서 '핵 방사능 물질이 바다에 섞여 있다고 한다면 대체 누가 바다를 찾겠냐'고 발언한 데 대해 "어떤 방사능이 나왔는지, 얼마 만큼의 기준치를 넘어섰는지 밝혀달라"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우리 바다에서 (이 대표 말대로) '세슘'이니 '무슨늄'인지 기준치 이상 측정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나"라고 되물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가치 공유 '소다자' 협의체 시도 잇따라

정부, 한미호·한미몽 3자 회의…기후변화 등 논의

정부가 지난해 말 첫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이후 호주, 몽골 등 지역 내 국가들과 새로운 형태의 3자 등 '소다자' 협의를 잇달아 시도하고 있어 주목된다.

외교부는 지난 3월 서울에서 미국, 호주와 함께 처음으로 '한·미·호' 3자 국장급 지역전략 대화를 가진 데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미국, 몽골과 제1차 '한·미·몽' 국장급 회의를 열었다.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와 최용준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 군테브수렌 뱜바수렌 몽골 외교부 정책기획국장이 참석한 한미몽 회의에서는 지역 및 국제정세와 함께 핵심광물, 개발협력, 기후변화 등 3국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3국은 회의 닷새 뒤인 지난 3일 공개한 '공동보도자료'에서 "한미몽 3국 회의를 정례적으로 순환 개최할 의향을 표명했다"며 정례 협의체 출범을 알렸다.

공동보도자료에는 3국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포함한 역내 발전에 대한 각국의 비전을 공유"했으며 "글로벌 광물 자원 공급망 내 몽골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고위급 대화 등 다양한 급에서 논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공유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3국이 함께 본격적인 협력을 모색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중 경쟁과 미·러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자리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전략적 가치가 커지고 있으며, 희토류 등 지하자원이 풍부해 공급망 관점에서도 중요하다는 평가다.

지난 3월 한미호 대화에서는 우정엽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관과 램버트 부차관보, 개리 코언 호주 외교통상부 북남아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3국의 인태 전략과 역내 주요 관심사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연합뉴스